

90. 2. 8

주부 88%가 간통죄 폐지 반대

서울시내 20~40대 4백50명 조사

‘성도덕 문란’ ‘가정파괴’ 등 이유

현직관사의 위헌제소를 계기로 폐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 주부들 대다수는 여전히 폐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.

한국리서어치 사회조사연구소가 지난 5월21~6월14일 서울시내 20~40대 주부 4백5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88.4%가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고 폐지반대론을 폈다. 특히 대졸자는 77.4%가 존속을 지지한 데 비해 고졸 90.3%, 중졸 89.3%, 국고졸 91.2%가 간통죄의 존속을 지지,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. 그러

나 사랑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는 50%씩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.

간통죄 존속 이유로는 ‘간통을 처벌함으로써 성도덕 문란을 방지했다’(78%), ‘가정파괴를 막아주었다’(67%), ‘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주었다’(71%) 등의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.

다른 한편 ‘이혼할 각오를 먼저 해야만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있다’(80.9%), ‘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 이용된다’(42.7%) 등 간통죄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.